

중국 동북공정과 한국의 대응방안

서길수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I. 동북공정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1. 1980년 이전의 귀속문제 논의

- 1) 중국 교과서 - 현재도 “고구려사=한국사”
- 2) 1962~65년 조·중 공동 고고학발굴대 - “고구려사=한국사”
- 3) ‘고구려=중국사’ 논리 개발의 시도
 - 김육불의 『동북통사』 : 한족(漢族) 위주 역사서술
 - 제1기 한족(漢族) 개발시대(상고~漢·魏)
 - 제2기 동호 부여 두 종족의 각축시대(수나라 초기)
 - 제3기 한족(漢族) 부흥시대(수·당)

2. 1980년 이후의 귀속문제 논의

- 1) 중국의 개방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부활
 - * 80년대 이전
 - 백수이(白壽彝) - 80년까지 유일한 표준
 -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범위를 바탕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역사 이래 이 토지에서 살던 선민들을 연구해야 한다”.
 - * 80년대 들어서 새로운 논쟁
 - 양건신(楊建新)
 - “중국 역사상 진, 양한, 수당, 원, 명, 청 시대는 모두 기본적으로 전국통일의 시대를 실현하였다. 이 시기는 중국 발전의 근간으로 이 시기의 강역도 역사상 중국의 강역 범위를 확정하는 주요 표준이 된다.”
 - * 한족 왕조가 아닌 - 원(元), 청(淸) 중국사로 편입.
 - 1981년 「중국 민족관련사 학술좌담회」 담기양(潭其驥)
 - “우리는 청조(淸朝)가 통일을 완성한 뒤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입하기 이전의 청조(淸朝) 판도 - 우리 역사시기 중국의 범위. 몇 백년이라고 해도 좋고 몇 천년이라고 해도 좋다. 이 범위 안에서 활동한 민족은 모두 중국 역사상의 정권”
 - 80년대 이후 이처럼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이 확산 - 동북지방의 최대 현안인 고구려 발해 문제 연구가 본격적인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2) 북한의 『조선전사』 출간과 중국의 반응

1979년 『조선전사』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연구

『조선전사』 3권(고구려) - ‘반침략적 애국투쟁정신’ 강조, 고조선-고구려-발해 정통론 부각

1985년 中國朝鮮史研究會 번역, 『朝鮮全史』, 1985 이후 중국의 고구려 논문 -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3) 1990년 고구려 귀속문제의 본격화

(1) 1990~1993년

90년에 들어서 고구려 귀속문제 본격 연구,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 음성적

아직은 ‘고구려=한국사’가 대세

* 1991 심양동아연구중심(瀋陽東亞研究中心) 설립

주임 : 손진기(孫進己), 직원 30명, 겸직연구원 100명

주요 저작 : 『中國考古集成』東北편, 華北편 등 총135권, 『高句麗 渤海研究集成』6권, 『高句麗研究系列』5권.

* 1993년 제1차 고구려문화 국제학술토론회

곳 : 집안시, 때 : 8월 11~14일

주최 : 해외한민족연구소, 조선일보사

(2) 1994년 이후 고구려 연구의 르네상스

① 한국에서 고구려연구회 설립

설립 : 1994년 6월 28일

서길수(서경대), 박성봉(경희대), 서영수(단국대), 윤명철(동국대) 같은 고구려 연구자

② 통화사범대학(通化師範學院) 고구려연구소

설립 : 1995년 7월, 소장 : 耿鐵華 교수, 楊春吉 교수

③ 길림성사회과학원 고구려연구중심

설립 : 1997년, 소장 : 孫文範(정년퇴직), 현재 : 劉炬

④ 길림성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

소장 : 楊昭全

⑤ 동북사범대학 동북민족강역연구중심(東北民族與疆域研究中心)

구성 학자 : 劉厚生, 孫啓林, 李德山

성과 : 『高句麗史話』, 『渤海國史話』,

⑥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중국변강지구 역사사회연구(中國邊疆地區歷史與社會研究) 동북공작참(東北工作站)

* 1996년 - 고구려 문제, 중국사회과학원 중점연구 과제 정식 입안

* 1997년 - 연구참가자들 길림성 고구려 유적 고찰

* 1997년 연말 - 과제 초고 완성

* 2001년 - 邊疆史地叢書 『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

⑦ 중요 학술대회

- ‘제1차 전국 고구려 학술토론회(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 - 1998년6월26일~28일 (3일간), 통화시

- 중국 동북지방사 학술토론회 - 1998년 12월, 장춘
- 제1차 전국 동북 민족과 강역에 관한 학술토론회(東北民族與疆域學術研討會)
: 1999년 7월 24일~27일, 길림성 장춘시·길림시

II. 동북공정의 실체

2002년 동북프로젝트(東北工程) 시작

‘동북 변경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연구프로젝트(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1. 동북공정의 배경

- * 최근 10 수년
 - 동북아의 정치 경제적 지위 날로 높아짐
 - 세계의 관심이 동북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 * 동북 변경지구 = 동북아의 중심 - 전략적으로 중요.
- * 몇몇 국가 연구기관·학자
 - 탄 속셈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 왜곡, 소수의 정객
 - 정치적 목적으로 황당무계한 논리로 혼란 조장
 - 동북변경사와 현상에 여러 가지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
- * 동북지역의 안정·발전 - 사회과학 연구의 신성한 사명·역사와 현황에 대한 학술 연구
 - 사회과학의 거부할 수 없는 책임

2. 동북공정의 기본 취지

- *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이 연합하여 조직하였다.
- * 기간 : 2002년 2월 ~ 2007년 1월(5년)
- * 취지 :
 - 1) 학술적 연구 - 동북변경의 역사와 현황
 - 2) 연구 심화 -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
 - 3) 수준 높은 성과 - 국제적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

3. 조직과 구성

- 1) 지도팀 - 중국사회과학원, 동북 3성 당위원회 선전부
- 2) 18명으로 전문연구위원회 - 책임자 마대정(馬大正)
- 3) 중국사회과학원, 동북 3성 사회과학 연구부분, 대학 연구기관

4. '동북공정' 전문연구위원회의 연구를 위한 5가지 의식.

- 1) 정치의식(政治意識) - 이 공정의 직접적인 목표는 국가의 장기적인 치안을 위한 것이고, 국가 통일, 민족 단결, 변경지역 안정이라는 큰 목표에 따른 것이다.
- 2) 둘째는 대세(大勢)의식(全局意識) - 다민족을 통일한 국가라는 대세의식, 세계적인 문제라는 대

세의식

- 3) 책임의식(責任意識) - 나라에 대한 책임, 인민에 대한 책임, 역사에 대한 책임
- 4) 정품의식(精品意識)
연구 성과 - 정부의 정책결정 자문 역할 해야한다. 후학연구에 기반 제공
연구 성과는 시간적 검증, 학술논쟁 거쳐야 한다.
- 5) 성신의식(誠信意識) - '자율', '정성(誠信)' 원칙
과제 책임서약의 요구에 따라 질적, 양적, 시간적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5. '동북공정' 전문연구위원회, 연구를 위한 '5가지 관계'

- 1) 정치와 학술의 관계 - 역사문제를 학술화하고, 학술문제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
- 2) 연구와 계획의 관계 - 연구=계획의 기초, 연구≠ 계획
원칙 - '연구무금구, 선전유기율(研究无禁区, 宣傳有紀律)
- 3)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관계 - 쟁점과제 선택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
- 4) 개인연구와 공동연구 관계
- 개인연구와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5) 보급(普及)과 제고(提高)의 관계 -
제고(提高) - 일류(精品)를 만들어 내는 것.
보급 - 대중으로 하여금 학술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
역사문제 보고서 - 관련 부서의 참고자료로 제공

6. 동북공정이 주재하는 각종 학술대회

- 1) '제2차 전국 고구려 학술토론회'
2002년 7월 9일~13일(5일간), 장춘시, 통화시
주최 : 中國社會科學院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吉林省社會科學院
후원 : 遼寧省社會科學院, 黑龍江省社會科學院, 吉林大學, 東北師範大, 遼寧大學, 延邊大學, 北華大學, 吉林師範大學, 長春師範學院, 通化師範學院
참가 : 100명 남짓, 논문 70편.
- 2) 고구려·발해문제 학술토론회(高句麗渤海問題學術討論會)
일시 : 2003년 8월 23~24일(2일간) 곳 : 길림성 延吉市
공동주최 : "동북공정" 사무실·연변대학 中朝韓日文化比較研究中心(교육부 文科基地)
주관 : 연변대학 中朝韓日文化比較研究所
참가 : 흑룡강사회과학원, 흑룡강성문물고고연구소,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통화사범학원, 연변대학, 요령성박물관, 요령대학, 심양동아연구소, 정주대학 및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 3) 제3차 전국 고구려 학술토론회
- 고구려 학술연구,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 지정 촉진, 고구려 국내성 천도2000주년 기념
일시 : 2003년 10월 9~11일(3일간)

장소 : 길림성 집안시 집안호텔

주최 : 길림성사회과학원 ·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 * 9일 오전에는 집안시 정부 주최 고구려 국내성 천도2000주년 기념축전과 상징건축물 제막식에 참가

Ⅲ. '고구려사=중국사' 중국의 논리는 무엇인가?

1.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다.

이것은 고구려 귀속문제 논쟁의 초점 가운데 하나이다.

- * 고구려를 세운 맥인 - 당시 중국의 한 민족이었다.
- * 기원전 3세기 - 모두 연(燕)의 영역
- * 기원전 2세기 - 연나라 위만(衛滿)이 위씨조선 건립
당시 위만 - 한나라의 위탁을 받아 그 지역을 관할.
- * 고구려 - 기원전 108년에 벌써 한(漢)나라 현토군의 한 현,
졸본부여(卒本夫余) - 한나라 현토군.
기원전 37년 주몽 고구려 5부 통일 - 당시 모두 한나라 현토군의 영토,
- * 중국 영토에서 진행 - 오늘의 조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2. 고구려는 독립국가가 아니고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 1) 주몽 건국 이전 - 한조(漢朝)의 현토군 고구려현 존재
- 2) BC37년 추모(주몽) 고구려 세운 뒤 계속 중국의 중앙정권과 신하로 예속되는 관계(臣附關係).
고구려후, 고구려왕, 정동대장군, 영주사사(營州刺史), 낙랑군공(樂浪郡公), 낙안군공(樂安郡公)
같은 관직을 받았다.

3. 북위, 북제 및 남조 의 각 나라 정권에 공물을 바쳤다.

- * 전체 역사과정을 통해 보면 고구려 왕국은 시종 중국의 한 지방민족정권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할거를 가지고 전 역사 기간 동안 중국에 귀속되었던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4. 고구려민족은 중국 고대의 한 민족이다. 한민족이 아니다?

- * 고구려가 망한 뒤 고구려 후예
일부는 중원으로
일부는 돌궐로
일부는 발해로 들어가 - 모두 중국 각 종족에 융화됨
대동강 이남의 일부 고구려인 - 신라에 귀속,
그 뒤 또 작은 수의 고구려인 - 당과 발해에서 신라로 돌아왔다
이런 고구려인만 - 조선족에 융화
- * 오늘날 조선족 - 선조는 주로 고대의 삼한(三韓), 즉 신라인 + 상당수 조선반도로 옮겨간 중국 각 종족. 고구려 후예는 극소수

5.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중국 국내전쟁이다.

- * 오늘날의 중·조 국경을 가지고 본다면 - 침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 이전 1000년간 (낙랑군 4백년 + 기씨조선, 위씨조선)
모두 중국의 한족이 지배하던 곳
- * 고구려가 반도의 북부를 점령 - 쳐들어와 점령한 것
한족 정권이 반도의 북부를 점령 - 잃어버린 땅 수복
- * 역사상 수·당이 고구려를 친 것 - 대외침략전쟁 아니고, 중국국내 민족간의 전쟁.
- * 「고구려가 고조선 땅을 되찾는다」 - 도리에 맞지 않다.
고구려인 - 고조선의 후대가 아님 - 수복할 권리가 없다.

6. 고려는 고구려를 이어받지 않았다.

- * 오랫동안 고려라고 불렀기 때문에 같은 나라로 잘 못 인식된 것.
왕씨고려 = 조선 역사, 오늘날의 조선족 선조가 건립한 것
고씨고려 = 중국 역사, 오늘날 중국 각 민족의 선조가 세운 것
- * 왕건(王建) - 신라 장군 - 신라를 멸한 다음 후고려를 건립.
왕건(王建) - 신라 김씨 계통, 고구려 고씨의 위(位)를 계승한 것이 아니다.
- * 왕씨고려(개성, 대동강이남) - 신라 옛 땅, 고구려 땅 아니다.
- * 고려시대 서희(徐熙) 주장 · 『송사(宋史)』도 인정 - 틀렸다
고구려 - 현재 조선의 역사라고 잘못 알게 하는 중요한 원인.

7. 한반도 북부 북한지역도 중국의 역사다.

- * 한반도 북부가 한국의 일부분으로 된 것은 15세기 이후의 일이다.
5세기 고구려 평양 천도 - 조선 국가가 된 것 아니다.
고구려가 두 나라로 나뉘어 속할 수 없다.
- * 기씨(箕氏)조선(기원전 11세기), 위씨(衛氏)조선(기원 2세기) = 중국 역사
이씨(이씨)조선 = 한국 역사
- * 당(唐)이 신라에게 대동강 이남지역을 떼어 주었고, 요(遼)가 압록강 이동 여진 영토를 고려에게 떼어 주었고, 명(明)이 도문강 이남의 땅을 조선에게 주었다.

오늘날의 한중국경은 한민족이 북쪽으로 확장하여 형성된 것이다.

IV. 중국의 최신 성과와 한국의 대응방안

1. 들어가는 말

2002년 소위 동북공정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최근 결과를 알 수 있는 책이 출간되어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하다.

『고대중국고구려역사속론』은 동북변강연구총서(東北邊疆研究叢書)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으로 2003년 10월에 발행된 책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 크게 충격을 준 동북공정은 원래 「동북 변경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인데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조직하고 동북 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성 위원회가 참여하고 지원하는 학술연구 프로젝트이다.

동북공정에서는 2002년 1차년도 연구과제로 26개를 선정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두 가지 연구 방향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기초연구분야 연구 성과를 모아서 출판한 것으로 동북공정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결과들만 출판하고 있다.

1차년도 연구과제 가운데 출판된 6권 책 가운데 한 권인 이 책은 연구과제로 참여한 연구성과가 아니고 동북공정을 이끌고 가는 마대정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직접 집필한 것으로 동북공정의 기본 의도와 진행 현황을 알 수 있고, 동북공정에서 차지하는 고구려사 연구의 위치와 고구려사 연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책이다.

2. 한국 고구려 역사 연구의 비학술화에 대한 우려

동북공정은 중국의 국책기관인 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에 합작하여 일정한 결론을 가지고 그에 맞추어 가는 식이기 때문에 순수 학문이라기보다는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한국의 고구려 연구가 학술적 연구를 벗어나 비학술화 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그들이 들고 있는 비학술화 경향을 간추려 보면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970년대 한국의 재야 사학계에서는 소위 '고대사 파동'을 불러일으킬 때 고구려사도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하였다. 둘째, 1983년 한국 육군 본부에서는 『통일과 응비하는 민족 역사를 향하여』라는 소위 '정신 교육용 역사책'을 편집 출판하였다. 그 책은 '잃어버린 만주 대륙, 우리 조상들의 용맹한 기상들이 숨쉬던 광활한 만주 벌판을 되찾자.'고 주장하였으며, 이런 비학술화된 '국수주의' 역사 인식은 당시 한국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소위 '대륙수복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셋째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일어난 한국인의 고구려 유적탐방과 연구팀은 남북한이 '대고려 민족주의'를 통해서 통일하려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분석은 상당히 치밀하고 광범위한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중국측의 연구목적이나 분석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북한이 고구려 유적을 세계유산에 등록하려는 노력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의 신구 양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고구려 사의 위치를 강조하는 연설을 발표하였다. 조선 정부는 '90년대 이후 '고구려시조 동명왕릉' 복원에 크게 힘을 쏟았고, 1998년에는 유네스코에 가입하여 조선 경내의 고구려 벽화 고분을 세계 문화 유산에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벌여왔다. 이는 분명 정치와 외교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학술과 문화의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관점은 중국이 세계유산 등록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북한 연구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북한의 고구려 연구는 1960년대 이후 크게 진전되었던 것에 비해 최근 연구 성과는 대부분 이전의 관점들을 보충하거나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학술적 발전과 성장 추세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한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①『고구려 귀속문제 연구』(길림문사출판사, 2000) : 「2차대전 후 한국 사학계의 고구려연구 개황」, 「한국 고구려연구회와 그 연구 상

황」; ②『총론』, 「한국사학계의 고구려 연구」; ③『속론』, 「한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 평론 - 백산학회와 고구려연구회를 중심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중국은 한국의 '고구려 붐'에 대해 상당히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있다. 「사회 전 범위에서 '고구려 붐'을 일으키고 있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놓고 말할 때, 한국 학계의 고구려사 연구는 조선 학계의 성과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다. 그리고 정계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 각계에서 고구려사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고 있다. 비록 형식적으로 조선과는 다른 것 같지만 그 목적(고구려사의 한반도 역사성의 강조, 중국 역사성의 부정)과 작용(정치화, 사회화에 이어 국제화에 이르기까지)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 강도는 오히려 북한보다 강하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남북한이 분열과 대치 국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서도 고구려 문제에 대해서만은 한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다민족 국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고구려 문제가 남북간 교류를 증진시킬 것이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고구려 문제가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고구려사 연구에 대한 중국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3. 고구려사 연구의 학술화를 위한 중국의 제언(提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구려사 연구의 학술화를 위해 중국이 내놓고 있는 제언인데 주목할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

첫째, 동북공정을 실시하는 초기에 비해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남북 학계가 고구려사가 중국 고대 역사의 일부분임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우리의 관점을 받아들일도록 강요해서는 안되며 학술적 규범과 국제 관례의 부합하는 정상적인 학술 교류와 논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며 학술교류와 논쟁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고구려사에 대한 중국의 연구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국 학자들이 해외에 나가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교류와 논쟁을 제안한 것은 고구려 연구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표시한 것이다.

둘째, 폐쇄적인 연구경향을 벗어나 적극적인 연구와 대처 방법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이나 도판 공개를 극히 꺼려하던 중국이 스스로 도록을 발행하고 그것도 걸음걸이를 더욱 빨리 한다고 다그치고 있다. 이것도 자신감을 표시한 것이다. 한국 학계로서는 정말 환영할만한 변화이다. 다만 남북한 출판물에 나오는 중국의 사진과 도판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전과 교과서에 나오는 고구려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고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일단 고쳐지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미리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넷째, 이른바 중국이 말하는 '한 역사를 두 나라가 사용한다(一史兩用)'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였다. 우리는 한 역사를 두 나라가 공유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고구려사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고구려사의 절반은 한국사라고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역사학자나 외교관들도 정말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누가 '일사양용'을 주장한다고 해도 중국에서 고구려 역사를 자기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고 놔두는 것이지, 고구려사가 중국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다섯째, 고구려 연구를 다음과 같은 사례처럼 연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얼마나 강대한 패권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내다보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고구려사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본보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1) 흉노의 서천(西遷)과 헝가리 민족과의 관계,
- 2) 돌궐 한국(汗國)의 몰락과 우리나라(옝긴이 주 : 중국)의 신장(新疆), 중앙아시아, 터키 등 상관 민족과의 관계,
- 3) 몽고 유목 제국의 해체와 우리나라(중국) 내몽고와 몽고, 러시아의 상관 민족과의 관계

이처럼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체 역사를 고대에서부터 현대의 헝가리, 터키,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와 연관지어 연구하는 중국의 중화사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정말 전시대와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전편에 흐르는 학술화 비정치화의 주장은 중국 스스로는 비학술화 되고 정치화 되었지만 고도의 전략을 통해서 학술화와 비정치화를 주장하는 태도를 바로 읽고 우리는 정말 학술적이고 비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동북공정 2년 만에 나온 결과는 상당히 진전되었고 나름대로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다. 3년 뒤 동북공정이 끝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예측과 함께 깊이 있는 연구성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4.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이상에서 5년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의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특히 국가가 연간 100억원을 들여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였는데 앞으로 진로문제를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 1) 동북공정은 고구려사만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설립되는 연구센터는 고구려만 연구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동북공정에서 2002년 1차 년도 연구과제 26개를 선정한 것을 보면 고구려 관계는 2가지 주제이고, 2003년도 결정한 2차 년도 연구과제도 15개 주제 가운데 2가지 주제만 고구려에 관한 것이다. 2003년 3월 수정된 동북공정 과제 지침을 보아도 이상하다고 할 만큼 고구려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북공정을 운영하는 진영 자체에서 고구려 문제를 직접 연구를 진행할 뿐 아니라 고구려연구소(통화사범대학)나 고구려연구중심(길림성사회과학원)처럼 고구려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개모집 주제에서는 비중을 낮다. 예를 들면 공모하지 않고 동북공정 운영자들이 직접 펴내는 『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馬人正 等,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같은 중요한 연구 업적이 동북변강연구 시리즈로 출판되고, 통화사범대학의 고구려연구소의 연구진들이 『중국고구려사』(耿鐵華, 길림인민출판사, 2002)를 비롯하여 수많은 연구업적들을 출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동북공정에는 고조선, 부여, 발해 만주족을 포함한 청나라의 문제, 간도 문제를 포함한 한중 국경문제, 러시아와의 국경문제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

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2) 새로 설립되는 재단은 '동북공정'을 상대로 하는 작은 재단이어서는 안 된다.

동북공정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까지 5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로 이미 2년이 경과했다. 앞으로 3년 밖에 지속하지 않을 동북공정을 상대로 거국적인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한시적 프로젝트에 대한 방어적 연구센터 건립이 아니라 중국이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중화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연구센터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억이나 200억 정도의 소규모 재단으로는 뒤쫓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왜곡에 대한 국민적 대응이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거국적인 역사연구센터를 발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만의 중앙연구원이나 중국의 사회과학원과 맞먹는 연구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3) 동북아 고대사 전체를 다루는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의 이름을 고구려연구센터나 고구려연구재단처럼 고구려에 한정하지 말고 "동북아 고대사 연구재단"이나 "동북아 고대사 연구센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구려연구재단」 준비 소위원회에서도 우선 「고구려연구재단」이라고 하고 앞으로 정부출연기관이 될 때는 명칭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좀 더 장기적이고 폭 넓은 연구를 위해서는 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 고대사 연구재단(센터)"에는 '고구려연구소', '발해연구소', '고조선·부여연구소', '한족(중국)연구소', '북방연구소' 같은 전문 연구소를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이 우리 역사를 철저히 분해하여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연구에 소극적으로 방어만 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우리도 중국과 그 주변의 역사를 철저히 연구하여 우리 눈으로 중국을 포함한 동북 아시아사를 다시 쓰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팽창하게 될 중화사상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물론 한족사(중국사), 몽골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북방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모두 참여하는 대단위 연구센터야만 한다. 예산 관계로 모든 방면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을 때는 개방형 연구체제를 도입해 프로젝트에 따라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파견근무를 하는 형태도 바람직 할 것이다.

5. 새로운 재단은 이미 있는 하드웨어를 활용해야 한다.

100억원이란 금액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하드웨어(건물과 시설)를 조성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따른 단발성 공약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옛날부터 해오던 연구비 분배기관이 되어 몇몇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수준의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이미 있는 기관을 새롭게 재편해서 그 기관에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시 말해서 이미 존재한 하드웨어를 활용하고 100억 원은 바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쓰자는 것이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깊이 있는 연구결과를 낼 수 있다.

최근 중국의 고위급이 한국에 와서 중국과 한국이 고구려에 대한 학술회의를 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중국측 기관으로 중국사회과학원을 내세웠다. 현재 중국사회과학원에는 연구소 31개, 연구중심 45개가 있고 2, 3급을 포함한 학과가 근 300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점 학과가 120개이고 구성 인원이 4200명이다. 그 가운데 연구 인력만 3200여 명인데 그 가운데 상급 전문가가 1676명이고 중급 전문가가 1200여 명이나 된다.

이에 상대를 해야 할 「고구려연구재단」은 우선 재단법인 형태로 출발하여 국가출연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그 규모가 사회과학원의 한 개 연구소만도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기관과 통합을 통해 대처할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 같은 기관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고구려연구재단」을 정문연에 두기로 결정했다가 시민단체의 반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정신문화연구원에 갖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한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철저하게 개혁해야지 또 다른 기관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있으며, 1년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2003년 167억원)을 쓰고 있다. 정신문연구원은 자료수집, 대학원 같은 기본적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 언젠가는 통합을 통해서 좀 더 대규모 연구소로 탄생해야 할 것이다.